

제28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부록)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제 목 : 대구 랜드마크로서 신청사의 가치와 시민친화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촉구

Q1 대구 랜드마크로서 신청사의 가치에 대한 질의

■ 세부질문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해 사용한 600억원의 청사 건립
Q1-1 기금이 충당되었는지?
충당되지 않았다면, 언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 답변

●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한 청사건립기금 600억원 중 100억원은 ‘20년 3회 추경으로 회수했으며, 나머지 500억원도 ‘24년까지 계획대로 전액 회수할 계획임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20년 (3회 추경)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통합관리기금 회수예정액 (코로나19 재원)	600	100	-	200	200	100

Q1-2 건립기금 확대와 과감한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답변

● 신청사 건립기금의 확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市 재정여건을 고려한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청사 건립과 관련 시 재정 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국비 등을 확보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신청사 일대를 개발할 계획임

※ 신청사 건립 사업비 3,000억원 + 도시재생사업비 α

● 아울러, 민간자본의 경우 개발이익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민간자본 유치는 신청사 건립 부지의 과밀 개발, 고수익 용도 위주의 개발(예: 고층 아파트)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Q2 신청사 예정지의 복합행정타운 구성에 대한 질의

■ 세부질문

Q2-1 대구시가 발표한 복합행정공간 구상에서 복합행정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의 범위와 이전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 답변

● 대구시 신청사는 연면적 97,000㎡ 정도로 건립할 예정임

- 대구시청사 47,900㎡, 대구시의회청사 6,600㎡
- 법적의무 및 사용수익허가 시설 12,800㎡
- 시민편의시설 9,700㎡
- 지하주차장 20,000㎡ 정도임

- 이중 사용수익허가 시설 12,800㎡ 안에는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 두류가압장이 포함되어 있음

< 참 고 >

법적의무시설 : 재난안전상황실, 민방위경보통제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충무시설, 직장어린이집, 기록관 등
사용수익허가시설 : 사업소(건설본부, 상수도본부 달서사업소, 두류가압장), 노조사무실, 은행 등
시민편의시설 : 북카페, 다목적강당, 민원상담실, 민원인 검색실 등

신청사 예정지에 대구교육청 청사 이전을 반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Q2-2 없다면, 인근 지역이라도 대구교육청 청사를 이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답변

- 대구교육청 청사 이전은 교육청 소관으로 우리 市가 이를 검토하기에 앞서 대구교육청의 청사 이전 의사 확인과 이전 예정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 다만,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청사 업무공간, 민원실, 회의실, 직원복지공간 등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고, 접근성 및 장소 인지도가 높아서 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현재로선 청사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신청사 예정지 또는 인근 지역으로의 대구교육청 청사 이전은 교육청에서 미리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진정한 행정복합타운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뿐아니라, 시 전역에

Q2-3 산재된 사업소, 유관기관들도 집약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통합 이전 계획은 있으십니까?

■ 답변

- 사업소는 수행하는 업무에 맞게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현재 별관에 위치하고 있는 건설본부와 신청사 예정지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시설(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 두류가압장 등)은 신청사 부지에 동반 건립할 예정임

* 각 공원관리사무소, 수목원관리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또, 최근 신청사 주변지역의 저층주거지들이 정부의 주택확대정책과 대구 부동산 시장 활황에 힘입어 초고층아파트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2-4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신청사 건물높이 계획으로는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대구 백년대계를 책임질 신청사가 랜드마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초고층 건물규모에 맞게 초고층 신청사로 건립 되어야겠는데, 변경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답변

- 신청사 건물의 높이는 향후 국제설계공모 추진 과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임
- 건축물의 랜드마크 기능은 건축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역사, 상징성, 형태, 디자인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나므로,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대구시를 대표하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Q3 신청사 건립계획 시민의견 수렴에 대한 질의

■ 세부질문

Q3-1 신청사 건립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과정에서도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 있으십니까?

- 2019년에 추진한 대구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청사 예정지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으로 결정되었음
- 대구시청은 더 이상 공무원만의 공간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함께 건립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함
- 이를 위해 신청사 건립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신청사 건립 및 설계공모 방향 연구’를 진행하였음
- 연구 결과 신청사 건립 전(全)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여 8월부터 추진할 계획임

- 신청사 일원 도시관리계획은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필요시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임

Q3-2 건립 및 개발계획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방법과 시민공론화 방법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 답변

-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패널)디자인단, 시민 의견조사, 대학 연계 협업프로그램,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신청사 일원 도시관리계획은 절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를 작성하며, 작성된 계획 도서는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시의회 의견을 구하고, 필요시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임

Q4 신청사 예정지의 시민친화공간 조성에 대한 질의

■ 세부질문

Q4-1 신청사 예정지에 '대구 시민광장' 조성계획과 관광객을 유인하는 공간 계획은 있으십니까?

■ 답변

- 옛 두류정수장 부지 중 도시재생사업 구역 일부에 광장을 조성하고자 관련 부서(도시재생과)와 협의 중이며,
- 창의적이고 우수한 신청사와 연계된 시민공간(광장, 공원 등) 조성을 통해 신청사 부지 일원이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Q4-2 신청사는 젊은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명소가 되어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젊음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계획은 있으십니까?

■ 답변

● 신청사 부지 내 시민편의시설 또는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생활SOC사업 등에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

서 면 질 문 답 변 서

2021. 7. 9. 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입니다.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감염병관리과)

질 문 요 지

1. 백신거래 관련 서류공개(구매협약서와 무역레터)에 관한 법적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경과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상세히 기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 사기를 치려던 회사와의 협약이 시민들의 알 권리보다 더 소중한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예방 및 각종 정책 관련 개선된 대구시 행정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업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효과적으로 업무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바람.
3. 시장님이 안센백신 관련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신 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람. 또한, 정부와의 정책공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답 변]

- ☐ 평소 시정발전에 애정을 가지시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관련 대구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백신거래 관련 서류공개에 관한 법적검토 추진경과와
 사기를 치려던 회사와의 협약이 시민들의 알 권리보다
 더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

- 화이자 백신도입 관련 서류에 대한 공개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메디시티협의회에서는 00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공식요청 하였음
- 그 결과 메디시티협의회는 00 법무법인으로 부터 ‘해외 무역회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른 상대방의 동의 또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된 거래, 조건 등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문서로 통보받았음

- 관련 서류의 공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메디시티협의회가 가진 법적 제약으로 인해 공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림
-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지만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타 권리와 저촉으로 안타깝게도 권리보장에 제한이 있는 점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예방 및 각종 정책 관련 개선된 대구시 행정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업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효과적으로 업무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 바람.

- 대구시는 지난해 2~3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기존 보건복지국내 1개팀 중심으로 운영되던 감염병관리 업무를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건강국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여,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특히, 당초 역학조사관 2명(공중보건의 1, 공무원 2)체제에서 시간선택제 역학조사관 5명(나급 2, 다급 3)을 추가 채용하여, 역학조사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본관 10층에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마련하여 “통합역학조사반”과 “병상배정반”을 운영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통합역학조사반의 경우 현재 13명(팀장, 역학조사관 5, 실무수습 7)이 근무 중에 있으며, 확진자 다수 발생 시에는 필요시 감염병 관리지원단과 행정인력을 추가투입하여 빈틈없는 역학조사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감염원조사중 사례가 30% 이상

이나 우리 시는 통상 20% 미만으로 역학조사 완성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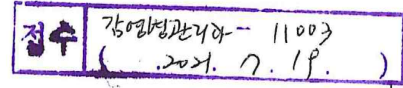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 종사자, 입소자를 비롯한
보육시설 종사자, 유흥업소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등 주기적
선제검사를 시행하여, 감염자 조기발견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함.
- 지난해 2월부터 1년 6개월간 계속된 코로나19 대응 및 금년
상반기 신설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업무까지 보건소와 대구시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상당한 실정이라는 하나,
직원 모두는 감염병대응의 최일선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대구시
방역안정화를 위해 주말없이 매진하고 있음.
- 금년 1월말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팀, 7월 1일자 이상 반응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예방접종과 접종후 이상 반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운영 중에 있음
- 향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 설치 운영
하고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음
-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해 방역 관련 간부들의 변경이 있었으며,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간부를 승진하여 수직이동
(보건의료정책과장→시민건강국장, 보건정책팀장→보건의료정책과장)
보임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공백 최소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인사이동으로 인해 일부 담당자 변경이 있더라도 부서
과장·팀장의 지도하에 업무 연속성을 유지해서 한치의 빈틈도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음.

3. 시장님이 안센백신관련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신 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와의 정책공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4월 13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발표에 따라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얀센의 백신접종 중단 권고(※출처 : CDC홈페이지, <https://www.cdc.gov/media/releases/2021/fda-cdc-lift-vaccine-use.html>)
 -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미국 내 얀센 백신 접종자 680만명 중 6명에게서 희귀혈전 부작용 사례 발생, 6건 모두 18~48세 사이 연령
- 미국 CDC와 FDA는 21년 4월 23일부터 자국 내 접종 재개를 권장하였으나,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얀센백신과 동일한 플랫폼(바이러스 벡터백신)으로 개발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유럽의약품청(EMA) 권고에 따라 만30세 이상으로 접종대상 범위를 최소화(4.10.)했듯이 얀센 백신도 동일하게 30세 이상만 적용하기로 결정함.
-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국정부가 얀센백신을 우리 군과 유관 종사자에게 접종하도록 공여하였으나, 백신이 30세 이상만 접종 가능하도록 결정되어 55만 국군장병 중 30세 미만인 41만여명(74.5%)이 접종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밝힌 의견임.
- 중앙정부 방역정책 공조와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 19 대유행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대구시청 내 범정부특별대책 지원단을 구성하고, 진단검사, 역학조사, 환자격리치료 등 중앙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방역상황에 대응해 오고 있음.
- 대구시는 그간 방역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의 정책공조가 느슨해지거나 소홀함은 전혀 없었음.

- 특히 지난해 2, 3차 재유행 시 타시도가 병상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대구시는 중수본의 협조 요청에 따라 경기도, 서울, 광주, 부산, 울산 등의 위중증 환자를 포함한 483명에 대해 지역내 7개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담당하였고, 금년 7월 초에도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수본 긴급요청에 따라 경기도 확진자 58명을 전원받아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중앙공무원교육연수원)에서 입소 치료하는 등 현재도 중수본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주4회 이상 운영 중인 중대본 회의에도 우리 시는 중요정책 건의사항이나 보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정책공조는 변함없이 유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사)메디시티대구협의회

수신자 대구광역시

(경유)

제 목 화이자 백신 관련 서류 공개 관련 회신

1. 대구광역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광역시에서 요청한 화이자 백신 관련 서류 관련 서류 공개 가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류 공개가 불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 1) 먼저, 화이자 백신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 2) 대구광역시에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해당 서류들은 해외 파트너사와 MCNDA (비밀보안협약)를 맺어 당사자간에 비밀유지 의무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공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3) 저희 협의회에서 해외 파트너사에게 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4)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회가 무단으로 관련 서류 및 거래 조건 등을 공개한다면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전문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5) 이유를 막론하고 저희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서류 공개에 동의해 드리지 못함을 전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끝.

(사)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



2021. 07. 16.

담당 이정협

본부장 김승호

협조

시행 협의회 2021-23

(2021. 06. 09.)

접수

- ()

우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28

/ <http://www.medicitydaegu.com>

전화번호 053-253-1575

팩스번호 053-253-1567

/ LJH@dgmt.or.kr

/ 공개